

## 목 차

### <권고안 및 위원회 운영>

1.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? ..... 1
2. 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? ..... 1

### <종합부동산세제 개편>

3.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‘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’라고 표현한 이유는? ..... 2
4.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? ..... 2
5.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대상에서 빠졌나? ..... 2

### <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>

6.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? .. 3

### <주택 임대소득 개편>

7.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? ..... 3

### <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>

8.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는지? ..... 4

### <중앙-지방-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>

9.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재정정보 연계가 왜 필요한가? ..... 5

<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>

- 10. 기금화의 법제화를 '22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? ..... 6
- 11.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 
보험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결정 훼손 우려 등 반대 의견이  
있어 왔는데, 이에 대한 특위 입장은? ..... 7

<나라살림 정보,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>

- 12. 맞춤형 정보제공의 완료 시기가 '22년인 이유는? ..... 8

<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>

- 13. 현재, 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, 나라재정 등과 재정운용  
중간보고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? ..... 9

<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>

- 14. 기존법 개정이 아닌 정보공개 관련 별도법을 마련할 필요가  
있는지? ..... 9

## <권고안 및 위원회 운영>

### ① 권고안에 소수의견을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?

- ☐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 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나,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수안으로 채택

### ② 하반기 특위 운영 계획은?

- ☐ 하반기 예산·조세소위원회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임
  - 상반기는 권고안 마련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공개진행시 언론 보도로 인해 논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일정까지 비공개 하였음
  - 하반기에는 일정 등 공개 가능한 사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하겠음

## <종합부동산세제 개편>

③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'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'라고 표현한 이유는?

- ☐ 금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
- 다만,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임

④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?

- ☐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.6만명(주택 27.4, 종합 6.7, 별도 0.8)이며, 예상 세수효과는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\*
- \* 1.1조원 : 주택 0.09조원, 종합 0.55조원, 별도 0.45조원
- 시가 10억원~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~15.2% 증가하고, 다주택자의 경우 6.3~22.1% 증가

⑤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대상에서 빠졌나?

- ☐ 상반기에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하였고,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임

## <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>

⑥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와 세수 효과는?

- ☐ '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~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 명으로,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 명(2천만원 이상자)에서 40만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
- ☐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

## <주택 임대소득 개편>

⑦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?

- ☐ (소형주택 특례\*) 1~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도 재검토가 필요
  - \* 기준시가 3억원 & 전용 60㎡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
- ☐ (기본공제) 주택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.3억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
  -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, 축소·재검토가 필요

## <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>

⑧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는지?

- ☐ 전기요금은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, 한국전력의 이익규모, 전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산정되므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특위의 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음
- ☐ 특위가 두가지 안으로 권고한 이유는 정부 측에 향후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조정여부를 검토후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폭을 결정·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임

<중앙-지방-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>

⑨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재정정보 연계가 왜 필요한가?

- 고령화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,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나라살림 전체에 대한 재정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필요
  - 그러나, 현재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재정사업의 정보를 조회하거나, 국가 전체의 나라살림 규모를 한 곳에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  - 따라서,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함으로써,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재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필요

<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>

⑩ 기금화의 법제화를 '22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?

- ☐ 기금화의 법제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,
  - 작년에 발표된 『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』은 '22년까지 추진되는 바, 우선 정부는 동 대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함
- ☐ 아울러,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착('17~'22년간 30.6조원)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『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』이 '22년까지 마련되어야 함
- ☐ 기금화 법제화를 위한 관련법(국가재정법, 국민건강보험법) 개정이 위와 같이 전제조건 충족과 병행하여 '22년까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



⑪ 건강보험의 기금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보험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결정 훼손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있어 왔는데, 이에 대한 특위 입장은?

□ 기금화의 목적은 건강보험 등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국민에게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국가 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있음

□ 그러나, 기금화할 경우 보험료율, 요양급여비용 등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결정\*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

\* 보건복지부 차관(위원장), 가입자·의약계·공익 대표 각 8인씩 총 25명으로 구성된 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’에서 심의·의결

○ 이에 대해서는, 이러한 의사결정사항이 국회에서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, 현재 기금으로 운용중인 타 보험(고용보험, 산재보험) 사례에 대한 비교·연구를 통해 정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

## <나라살림 정보,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>

### ⑫ 맞춤형 정보제공의 완료 시기가 '22년인 이유는?

□ 현재 정부는 부처별로 개인 혜택정보 플랫폼을 운영 중

#### < 운영 중인 개인 혜택정보 플랫폼 >

##### ◇ e-나라도움(기획재정부)

- 보조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

##### ◇ 복지로(보건복지부)

- 생애주기, 가구 상황별 복지정보 제공

##### ◇ 교육지원한눈에(교육부)

- 개인의 조건(소득수준 등)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 맞춤형 제공

□ 개인혜택 정보를 '열린재정'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연계·통합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

- 우선, '18년에는 재정사업을 복지, 교육 등 16대 분야로 구분하여 제목 검색이 가능하도록 '열린재정' 홈페이지를 개편하고,
- '19년까지, 보조금 1,645개(66.9조, '18년 기준) 세부사업에서 보조금·용자·출연 등 2,432개(130.8조, '18년 기준)로 혜택정보를 확대하며,
- '22년까지 중앙정부에 한정된 혜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로 포괄범위를 확대한 뒤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

## <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>

⑬ 현재, 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, 나라재정 등과 재정운용중간보고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?

- ☐ 월간재정동향, 나라재정은 변경된 경제전망과 재정전망 없이 예산집행현황을 단순 통계자료로 제공
- ☐ 재정운용중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간에 해당연도 예산집행 현황과 변경된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임
  - 이를 통해, 예산집행 과정 중에 국민이 예산집행을 모니터링하고, 남은 회계기간의 예산집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

## <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>

⑭ 기존법 개정이 아닌 정보공개 관련 별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?

- ☐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해 명시한 국가재정법 9조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,
  -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중앙정부에 한정되므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으며
  - 별도법을 통해 중앙정부-지방자치단체-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재정정보 표준화 및 정보연계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